

# “양극화 타개로 新 중산층 시대 열 것”… 맞춤형 정책 준비

## 尹, 임기 후반기 정책 드라이브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과 논의 양극화 기본 구조적 원인 진단 당부  
자영업자, 청년층 등과 자리 마련  
신년 초 구체적인 계획 발표 예상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대통령이 ‘양극화 타개’를 들고 나왔다. 양극화를 해소해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하반기 국정 목표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를 위해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 기도회’에서 “정부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기조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면, 하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각자 국가 발전에 열심히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민생과 경제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서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같은날 오후 윤 대통령은 김한길 국민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기도하고 있다. /뉴스1

민통합위원장 등과 만나 양극화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도 양극화가 타개되어야 이뤄질 수 있다”며 “양극화의 기본적 구조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진단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임기 전환점 이후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 및 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

을 해야 한다”며 “양극화 타개”를 국정 과제로 공식화한 바 있다. 국정 초반은 경제활력, 후반은 중산층 활력을 목표로 두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해진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해의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하반기 국정기조인 양극화 타개를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일정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최근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층 등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두루 청취하는 자리들을 많이 마련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양극화 타개’의 목표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사회적 사다리를 주는 정책 과제를 발굴해 중산층을 강화하는 데 있다. 이에 현금성 지원보다는 각 연령별, 직군별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들이 경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이같은 기조는 윤 대통령의 평소 지론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조찬기도회 모두발언에서도 엿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조찬기도회에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면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뛰어야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며 “국민의 일부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가만히 앉아 있다면 국가는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누구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중산층이 두터워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지지율도 낮은 상황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지율이 낮아지면 하반기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우니,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 ‘양극화 타개’가 제시됐다는 의미다.

한편 정부는 조만간 ‘양극화 타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중이나 내달 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지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 소득·교육·청년층 일자리 등 양극화 해소 방안을 망라한 종합적인 양극화 타개 정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계획을 윤 대통령이 신년 초 직접 발표할 수도 있다.

아울러 ‘양극화 타개’를 위한 국정과제는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발굴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통합위 분과 별로 과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 그리고 대통령실 정책실과도 소통을 해서 의견을 제시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통합위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李, 오늘 위증교사 1심 선고… 두 번째 사법리스크 고비

금고형 이상 선고 시 리스크 고조  
정치권, 유죄 나올 가능성 높게 봐  
민주당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재판의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에도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이재명 체제’의 리더십이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2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25일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가 열흘 만에 사법리스크의 두 번째 고비를 맞는 셈이다. 게다가 이날은 ‘이재명 2기 지도부’ 출범 100일이다. 만약 이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의원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김건희-채상병 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에도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사법 리스크는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

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사건의 발단은 이 대표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과거 벌금형이 선고된 ‘검사 사칭 사건’은 사실이 아니며,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한 데에 있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PD와 공모해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했다는 내용으로, 당시 이 대표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대표는 ‘누명을 썼다’는 대답으로 인해 2019년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증인이었던 김진성 씨와 여러 번 통화한 뒤 자신의 토론회 발언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유리한 증언을 청탁했다는 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 내용이다.

이 대표 측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김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으며 거짓 증언을 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검찰이 통화 녹취록의 극히 일부분을 제시해 공소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의 관심은 25일 법원이 내릴 형량 수위에 쏠려 있다.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이 대표의 정치적 위기는 가중된다. 특히 이 사건은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만일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5년(3년 초과) 10년 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이 대표의 재판 상황도 좋지 않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재판 초반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법원은 이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고 판단하기도 했다.

무죄를 기대했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 역시 1심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측은 25일 이 대표가 법정 구속될 것이라는 발언도 나온다.

민주당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될 경우, 공직선거법 재판과 마찬가지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고 보고 있는 점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그대로 동일하게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향후 이 대표의 재판은 여러 건 남아있어, 이 대표와 민주당의 정권 교체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1심 선고를 받은 후에 민생 행보를 보였지만, 사법리스크의 파장이 커 효과가 희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1심이기 때문에 당장은 파장이 없더라도, 이같은 판결이 누적될수록 당내 리더십 손상이 불가피하다. /서예진 기자

# 신원식 “트럼프,尹에 ‘취임 전 만남’ 3~4차례 제안해”

(국가안보실장)

이후 ‘취임 전 회동하지 않는다’ 방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취임 전 만나자는 제안을 3~4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양 정상은 통화할 때제가 배석했다”며 “(취임 전에) 만나자는 말씀을 트럼프 당선인이 먼저 3~4차례 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 뒤로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인선 문제, 국내 문제, 취임 전 준비, 또

여러나라가 사전에 만나기를 원하는 점등을 고려해 취임 전에는 외국 정상을 만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어쨌든 우리 정부는 당선인 측과 긴밀히 소통해나가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미국 대선이 마무리된 지난 7일 트럼프 당선인과 12분간 통화했다. 이후 윤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을 계기로 트럼프 당선인과 첫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취임 전에는 회동하

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워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다.

한편 신 실장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압박 징후는 없지만 준비 마까지 단계”라며 “연말 이전 발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이 올해 세 차례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공언한 데 대해서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5월 발사 이후 6개월이 지났는데 북한이 신행 발사체계를 갖추면서 지휘체계를 통합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가능성도 제시했다. 신 실장은 “(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6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에 대한 답방 형식이 될 수 있고, 푸틴이 북한의 파병에 감사하기 위한 예우 차원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여러 민감한 현안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20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이달 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면담한 것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서예진 기자

# 尹-말레이시아 정상회담 양국 간 실질협력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만나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대통령실은 24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11월 24~26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면서 “윤 대통령은 25일 안와르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과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